

여야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발의

문금주·정점식 의원 공동

전남·경남·부산시 협의 초안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 담야

전남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을 세계적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 의원 등은 전남도를 포함해 경남도와 부산시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을 정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남해안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심·해안·갯벌 등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과 지역만의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연결하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전남도와 정치권 판단이다.

그럼에도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 보전·관리, 주요 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미흡해 발전이 더디게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SOC·관광·해양 등 종합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입장이다.

문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남해안권 종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조직(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과 국가 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보존 근거 마련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관광진흥지구·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문화관광, 휴양·치유관광, 해양·수산, 수상레저, 스포츠, 웰니스,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조항 뿐 아니라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농심 뿔났다' 기사 들고 소값·살값 하락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0일 열린 제 415 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 광주일보 지면(6월 20일 1면)을 소개하며 소값 하락과 살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제 등의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전남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남해안권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영호남 각각 별도의 특별법안을 낸 것과 달리, 양·사·도가 합의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형태로 법안이 만들어져 법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는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입법 지원 활동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남해안 종합개발과 관련, 문제부를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진행중이며 해수부는 남해안권을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부, 문제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상호간 중복투자 방지와 연계를 위한 통합조직 신설과 국가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담은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 부산과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박찬대 "국힘, 대통령도 1년씩 하자고 하나"

추경호 '법사 위원장' 제안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의 원 구상 제안을 두고 "이러다가는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황당한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 구성이 불합리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다음 날 바로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하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럴 거라면 선거는 왜 하나"라며 "총선 민심은 야당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 난 민생과 서민의 절규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 관심도 대책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라며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집권 여당은 국회 밖에서 불법 파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속히 원 구상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오늘이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나은 대책이 없으면 민주당의 안을 받아라.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왜 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 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를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다. 국회로 돌아오라는 것이 국민의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 "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을 대복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복송금 의혹 등

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 김정현·김화진

국민의힘이 20일 광주시당위원장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 관산당 당협위원장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0일 오후 시장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정현 관산당 당협위원장을 신임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총선 패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며 "앞선 시장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광주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시장위원장을 역임하면서 200여 차례 중앙당을 오가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역할을 해왔고, 지난 2022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치 및 전남대 새 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냈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4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향후 1년간 광주시당을 이끌게 된다.

신임 전남도당위원장에는 김화진 전 전남도당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화진 전 전남도



김정현

김화진

당위원장은 18일부터 이를 간 이뤄진 모바일·ARS 투표 결과, 고영호 전 여수군 당협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오른 뒤 3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 오는 24일 비대위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기(1년)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전남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0%에 가까운 참여율을 기록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당선자는 "다시 기회를 준 것은 전남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라는 명령일 것"이라며 "화합하는 전남도당을 최우선 목표로 해 전남발전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일념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의도 접촉면 넓히는 김동연... '이재명 대항마' 자리매김 포석?

국회 GTX 플러스 협약식 참석

전해철 등 비명계 인사들 영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와의 접촉면을 부쩍 늘리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연구원과 추미애·조정석·박정·윤호중·한준호·김용태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 20명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GTX 플러스 상생 협약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GTX 플러스는 경기 북부·서남부권의 GTX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으로, 김 지사가 직접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의 숙원 사업이다.

그는 행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또다

른 지역 현안인 '경제 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영입한 것과 맞물려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옛 친문(친문재인) 출신 비명계 인사인 전해철 전 의원이자 김 지사는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운 상징적 인사인 만큼, 당내 기반이 약한 김 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친문·비명계를

끌어안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지사는 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못 박은 당헌에 예외 조항을 추가할 때도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권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이 GTX와 경기도 일하느라 바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기도가 비명계 인사들을 영입한다는 지적에도 "특별히 정치 세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유력한 대권 주자이자 당권을 쥔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김 지사가 대권행보에 나서려면 현실적으로 비명계와 손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